



제301회 남양주시의회(임시회)
제4차 복지환경위원회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한승연 의원 대표발의]

검 토 보 고 서

2024. 3. 7.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서용관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1. 제안경과

- 본 조례안은 2024년 3월 6일 한송연 의원 등 열일곱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여 3월 6일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임.

2. 제안이유

- 한의약은 오랜 기간 시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남양주시 특성에 맞는 한의약 육성지원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한의약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시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를 규정 함 (안 제1조~제2조)
- 나. 대상 시설, 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 (안 제3조~제5조)
- 다. 실태조사 및 사업지원의 근거를 규정 함 (안 제6조~제7조)
- 라. 자문, 시민참여, 포상, 시행규칙을 규정함 (안 제8조~제11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붙임1
- 나. 예산조치 : 붙임2 (비용참조)
- 다. 관련부서 :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
- 라. 입법예고 : 2024. 3. 7. ~ 3. 12.(6일간) /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학 육성법」에서 정한 기초자치단체의 책무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 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한의학 육성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임.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고,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고 「한의학 육성법」 제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학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 경기도는 지난 12월 한의학 육성·지원 사무를 담당할 한의학팀 신설과 「경기도 한의학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학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구체화 하였음
-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한의학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시의 한의학 관련 사업인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사업 외, 양한방을 아우르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예방사업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어 보임

☑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의 보호·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보건의료 수요를 형평에 맞게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식품, 의약품, 의료기기 및 화장품 등 건강 관련 물품이나 건강 관련 활동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각종 국민건강 위해 요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이 행하는 보건의료에 대하여 보건의료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국민건강증진법**」

제3조(책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

② 모든 국민은 자신 및 가족의 건강을 증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타인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9조(건강증진사업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요원 및 시설을 확보하고, 그 시설의 이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한의학 육성법**」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한의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학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학기술의 과학화·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고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기술의 정보화
4. 한의약에 대한 체계적 관리 및 국제기준 규격화
5. 한약재의 안정적 생산 기반 조성
6.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7. 한약시장의 지원·육성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역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지역계획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제3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 수반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 남양주시 한의약 육성지원 조례안

나. 재정 수반 요인

- 제6조(한의약 육성 계획의 수립·시행 등)제2항제2호

: 한의약 육성 관련 주요시책 및 재원조달 등에 관한 사항

- 제10조(보조금 등 지원)제1항

: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남양주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지원규모, 대상 등 소요 비용을 파악할 수 있는 재정 수반 요인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기술적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향후 지역계획 수립 시 소요 비용 추계 가능

4. 작성자

남양주보건소 건강증진과장 이춘희